

EU Brief

| EU 동향 |

•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EU경제

EU's economy starts to climb out of doldrums

• 유로화, 단기 조정 후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예상

Euro is expected to gradually appreciate against dollar over a long term

•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서 부각되는 중국의 대EU 투자

Rising importance of Chinese investment in EU economy during sovereign debt crisis

• 한·EU FTA 체결에 따른 EU의 양자 세이프가드 규칙 제정 동향

Safeguard clause in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 유럽 은행산업의 판도 변화

Reconfiguration of EU banking scene after financial crisi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EU경제
EU's economy starts to climb out of doldrums

002



EU Economy

유로화, 단기 조정 후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예상
Euro is expected to gradually appreciate against dollar over a long term

004



EU Politics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서 부각되는 중국의 대EU 투자
Rising importance of Chinese investment in EU economy during sovereign debt crisis

009



Trade & Investment

한·EU FTA 체결에 따른 EU의 양자 세이프가드 규칙 제정 동향
Safeguard clause in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015



Industry Trends

금융위기로 인한 유럽 은행산업의 판도 변화
Reconfiguration of EU banking scene after financial crisis

019



EU Law

EU의 동물복지정책과 한-EU FTA에 대한 의의
Enhancing cooperation on animal welfare issues through EU-KOREA FTA

026



Social Issues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유럽의 사례와 함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European approach

030



Report Review

유럽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 개혁이 좌우
Economic reform policies are keys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EU countries

035



EU Centre news

제6회 브뤼셀 포럼
The 6th Brussels Forum

037

제2회 EU 학생 방문 프로그램
EU Summer Intensive Programme: 'Learn about the EU' 2010 Brussels Tour

038

제15회 EU 특별강연
The 15th EU Special Lecture

039

제8차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
The 8th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040

EU Brief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Yonsei-SERI EU Centre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The EU Brief is a newsletter publish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and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본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위원: 이종규, 양오석 | 감수 위원: 김득갑 | 편집 담당: 정민경 | EU Brief에 게재된 내용에 관한 문의나 개선사항은 편집 담당(02-3780-8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EU경제

EU's economy starts to climb out of doldrums

그동안 글로벌 금융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해왔던 유럽발 7월 위기설이 점차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U 회원국들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EU경제의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하다는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유럽 은행산업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주식,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 관련 지표들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유럽 금융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안정세를 되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는 그동안 EU의 잠재력과 위기극복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을까? 2009년 12월에 정치 통합을 가속하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었지만 EU는 체제를 제대로 정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남유럽 재정위기를 맞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사태로 발전하였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유럽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영어권 해외 매체를 통해 유럽 정보를 주로 접하는 우리로서는 'EU 깎아내리기'에 익숙한 미국과 영국인들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EU는 점차 체제를 정비하면서 보다 단합된 모습으로 위기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둘째 요인은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가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 말까지 유로화 환율의 급락은 유로지역 수출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세계경제 회복과 환율효과로 인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셋째 요인은 유럽발 7월 위기설의 진원지였던 유럽 은행산업의 시장신뢰 회복이다. 그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 금융기관들의 잠재적 부실이 치유 불

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불신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7,500억 유로에 이르는 EU 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대출시장이 마비되어 시장불안이 지속되어 왔다. 2010년 7월 23일에 발표된 91개 유럽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테스트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테스트 결과 7개 은행을 제외한 84개 은행은 경제침체와 금융시장의 충격이 있더라도 충분히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발표 결과를 반신반의했지만 주요 유럽 은행들의 2분기 경영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타나면서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EU경제는 전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완전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경제에 이상 조짐이 다시 나타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U경제의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은 세계경제의 향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여전히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것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동시에 위기의 뿌리인 회원국 재정문제를 치유하는 구조적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유로지역은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경제 체질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단기 회복에 도취되어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EU가 제2의 위기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The global financial market has been threatened by EU member states' sovereign debt problems and the instability in their financial sector. Yet, market observers' worries that the EU will face another major financial crisis in July were somewhat overstated. EU member countries have started implementing austerity measures to rebalance their public finances and positive macroeconomic signs from leading countries in the EU have helped restore some confidence in the market.

There appears to be three key component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viving the EU's financial marke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First of all, it seems that many have been underestimating the EU's economic potential and its ability to recover from the financial crisis. EU's political leadership was slow to act to calm the market during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is was mainly because they did not have enough time since the Treaty of Lisbon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 2009, to actually start implementing measures to organise their economic system and fractious policy processes. EU leaders were rather indecisive in bailing out vulnerable countries at the beginning, but they have started cooperating much better more recently. They have agreed to take urgent actions to cut their budget deficits.

Secondly, the weak euro helped boost exports from the EU. As the sovereign debt crisis started to spread across the EU, the euro experienced a prolonged period of depreciation between December, 2009 and May, 2010. The rapid decline of the euro helped restore eurozone countries' export competitiveness.

Thirdly, the market confidence in the EU's banking sector has started to revive. Analysts had been very sceptical as the European bank exposure to PIGS' sovereign debt appeared to be very high. Even the € 750 billion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 was unable to thaw the interbank lending and financial market jitters continued. The publication of results for stress tests on European banks showed that only 7 banks out of 91 failed. Many analysts criticised that the tests were too soft, but the results largely did the trick as they were regarded as fairly transparent and showed that most banks hold enough Tier 1 capital to withstand the main sovereign risks and economic downturn. Mixed market reactions to EU's stress test results were followed by major European banks announcing their second quarter profits which were better than market's expectations.

When will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end in the EU? The global economy remains fragile for now as the bad news from the US economy and China are offsetting more upbeat signals from the EU. The EU economy is closely integrated to the world economy and many European countries depend heavily on overseas demand. EU member states with heavy government debts must continue with their unpopular cost-cutting reforms and they should cooperate to fix their large economic imbalances. The EU now has an opportunity to resolve many of its economic problems. It is much too early to claim victory as there still exists the possibility of another downturn in the EU's economy. Another crisis in the EU will ruin its chance to retain its status as a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leader. ★



유로화, 단기 조정 후 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예상

Euro is expected to gradually appreciate against dollar over a long term

The euro-dollar exchange rate has undergone major fluctuations over the past one and half years. After the euro having depreciated to a very low level, it has recently bounced back, stabilising around 1.30 euros against the dollar. These major fluctuations are mainly due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at began in Greece. The dollar-euro exchange rate has broadly tracked the developments in the sovereign debt market and the euro exchange rate is closely linked to the health of the EU's financial market conditions. The value of euro is expected to depend on the ability of EU governments to effectively adopt various budget cutting measures. The euro could depreciate little further or fluctuate around the current value i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becomes unstable again, but these will only be a temporary trend.

요동치는 유로화 환율

2009년 이후 달러/유로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유로화 환율은 2009년 3월 5일 1.25달러에서 2009년 11월 25일 1.51달러로 크게 오른 후(20.6% 절상) 2010년 6월 7일 1.19달러까지 급락(21.2% 절하)했다. 한때는 달러/유로 환율이 역사적 평균치인 1.184달러(1999~2010년)에 근접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급락하던 달러/유로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어 최근에는 1.30달러대(10.1% 절상)에서 움직이고 있

다. 지난 1년 반 동안 유로화 환율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였다.

2009년 3월 이후 달러/유로 환율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약 8개월 간격으로 이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8개월간 달러/유로 환율이 상승했고, 그 이후 2010년 6월까지 환율이 하락했다. 2010년 6월 초부터는 다시 환율이 상승 기조로 바뀌었다. 이러한 특징은 당분간 달러/유로 환율이 급락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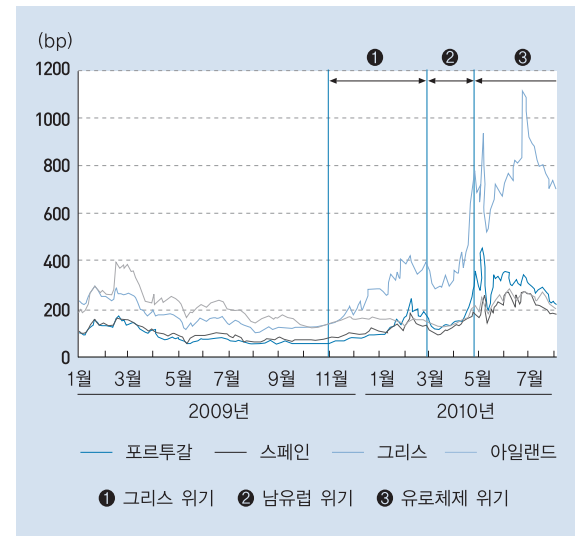
다음으로 엔/유로 환율도 달러/유로 환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파운드/유로 환율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3월 대비 2009년 10월 유로화는 엔에 대해 10.7% 절상, 그 이후 2010년 6월까지 20.1% 절하, 그 이후 다시 4.0% 절상되었다. 반면,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영국 재정문제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유로화 가치와 동조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유로화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에 의해 좌우

유로화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유로화 환율은 유럽 이외의 글로벌 요인보다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전개 양상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유로화는 2009년 3월 이후부터 2009년 10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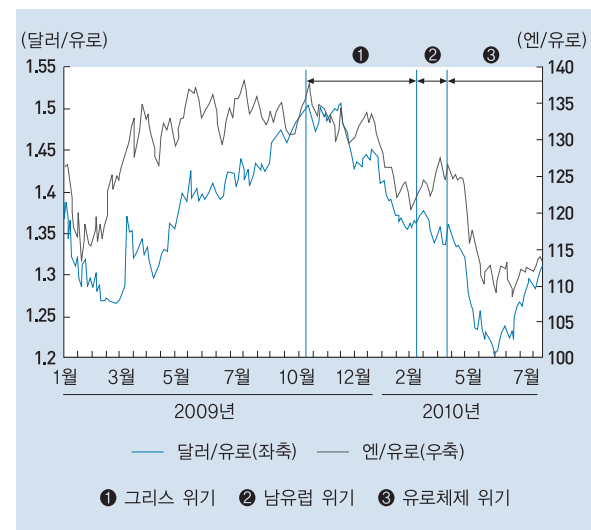
★ PIGS 국가의 국가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미국발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10월 말 두바이월드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가 대두되면

★ 2009년 이후 달러/유로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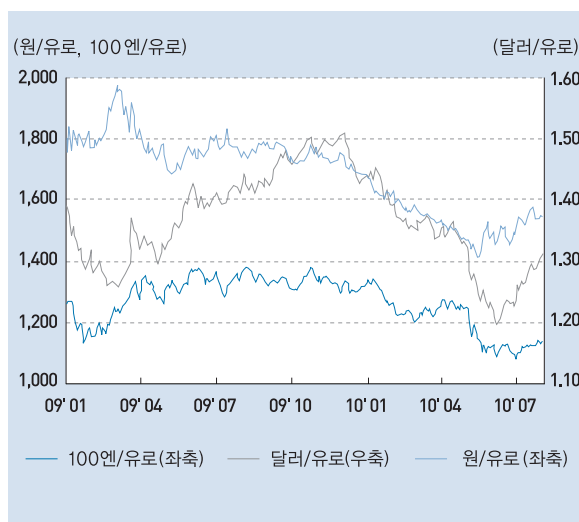
서 유로화 가치는 약세로 반전되었다. 2010년 3월 이후에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그리스에 국한되지 않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로 확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5월에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 EU 체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이렇게 그리스 재정문제에서 시작된 위기감이 유로 및 EU 체제의 위기로 발전하면서 유로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유로화가 위험통화로 인식되는 이유

유로화 환율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여건이 안정되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반대로 글로벌 금융여건이 불안하면 약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로화가 위험통화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위험지표인 VIX와 달러/유로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0.541(2008년 1월~2010년 8월)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달러화와 엔화는 안전통화로 인식돼 유로화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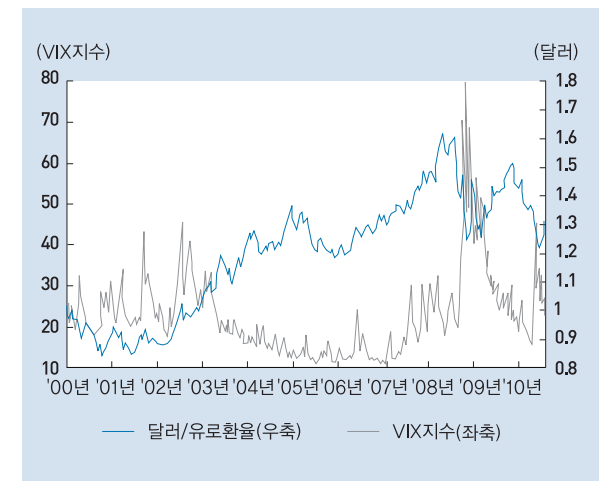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유로화는 달러화, 엔화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는 유로화가 달러화, 엔화에 비해

★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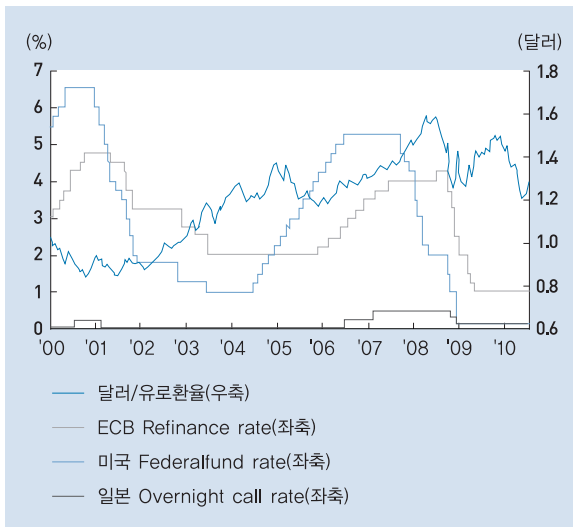
★ VIX와 달러/유로 환율 그래프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특히 위험하기 때문은 아니다. 유로지역 경제는 미국 경제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등하며 물가는 미국에 비해 안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유로화가 달러화, 엔화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유로화가 엔 및 달러 캐리트레이드 진행 시 투자대상 통화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저금리 통화인 엔화와 달러화를 차입해 상대적 고금리 국가인 유로화나 신흥시장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즉,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유로화는 강세, 엔화와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게 된다. 반대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기존의 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됨에 따라 자금 흐름이 역으로 진행되므로 유로화는 약세, 엔화와 달러화는 강세를 보인다.

★ ECB, 일본, 미국의 정책금리와 달러/유로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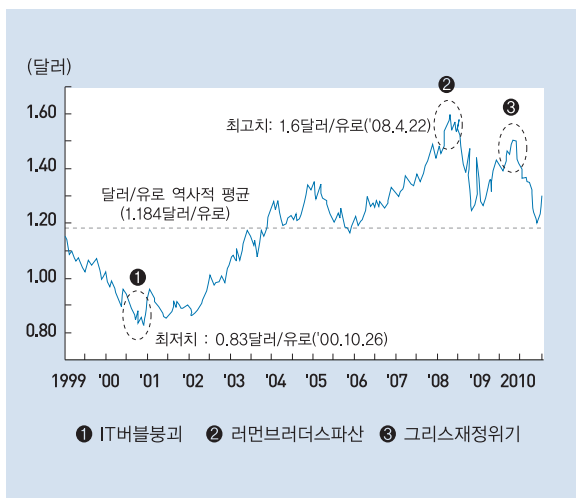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향후 달러/유로 환율은 조정 후 완만한 강세 예상

유로화 환율의 향방은 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 달러/유로 환율은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1999년 이후 달러/유로 환율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최근 유로화 환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기보다는 유로체제 붕괴라는 최악의 국면을 탈피했기 때문이다. 즉, 유로 체제의 붕괴 우려를 반영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유로화 환율이 최악의 국면을 탈피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 유로 체제의 시장신뢰 조건 및 전망

조건	장애요인	전망
조건 1 구제금융 패키지: 구체적 집행방안 확보	-재원조달 방법, 시기, 조건, 부담비율 등 결정의 어려움	긍정적
조건 2 회원국: 재정긴축 및 구조조정 시행	-회원국 내부의 국민적 반감 -시행 시 경기침체 가능성	점진적 (소극적)
조건 3 유로체제: 재정통합,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 제도 보완	-여러 회원국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	부정적

상승한 것이다. 현재 소극적 차원에서는 유로 체제의 붕괴 우려가 진정되었지만,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로화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가 가시적인 해결 국면으로 진입하기까지 간헐적인 불안이 나타나며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유로 환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재정문제 해결과 유로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가지 조건이란 구제금융 패키지 집행과 재정긴축 및 구조조정 시행, 유로 체제의 제도 보완이다. 구제금융 패키지와 회원국의 재정긴축 및 구조조정 시행은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통합,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 유로체제의 제도 보완은 회원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유로화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 체제의 제도 보완이 지연되고 유럽의 긴축재정 추진에 따른 성장 둔화 등으로 상승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유로화가 유로 체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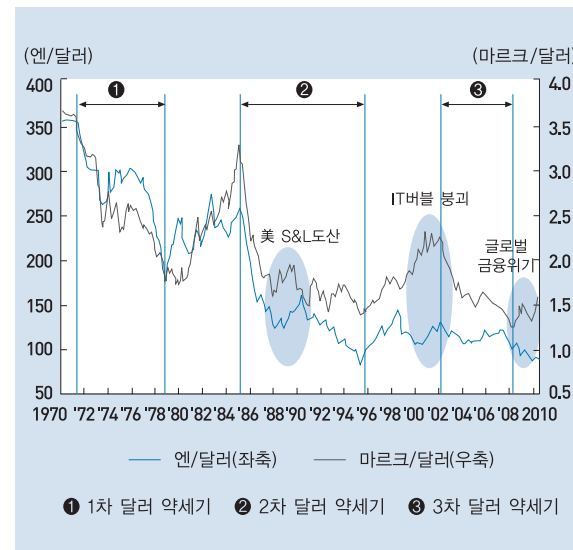
중장기적 달러 약세 재료는 유로 강세 요인

최근 달러화는 미국발 금융불안, 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불안 요인에 의해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금리, 물가 요인에다 달러화 신인도, 미국 및 국제사회의 달러화 정책 등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율 결정 요인을 고려해볼 때 달러화는 중장기적으로 약세 추세가 예상된다. 최근 상황이 1970년 이후 진행된 세 차례 달러화 약세기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진행된 세 차례 달러화 약세기는 닉슨 쇼크¹ 직전(1971년 4월)부터 2차 오일쇼크 직전(1978년 10월)까지의 1차 약세기, 플라자 합의² 직전(1985년 4월)부터 역플라자 합의(1995년 4월)까지의 2차 약세기, 2002년 유로화의 공식 출범, 테러와의 전쟁과 美 기업 분식회계 사태 이후 2008년 3월까지의 3차 약세기로 구분할 수 있다.

★ 1970년 이후 달러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최근 상황과 과거 달러화 약세기는 공통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물가, 달러화의 신인도 하락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2010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9.7%로 달러화 약

¹ 닉슨 쇼크(1971년 8월)는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 붕괴를 촉발시킨 사건.

² 플라자 합의(1985년 9월)는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화 약세 유도를 결정한 회의.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서 부각되는 중국의 대EU 투자

Rising importance of Chinese investment in EU economy during sovereign debt crisis

The Europe Union is a key investment market for China's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2.4 trillion, and many EU firms believe that China's investment will help revive the EU's much troubled economies. China's surging investment in the EU is mainly in the form of direct investment. Despite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encourage their businesses to invest abroad, Chinese firms had been rather conservative in the early years. The flow of Chinese capital into the EU has only started increasing very rapidly in the past few years. China's investment in the EU is currently concentrated in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s the China's economy develops, the characteristics of its investment abroad are expected change, and they will differ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destination country.

그리스 사태 이후 대유럽 중국투자가 주목

최근 유럽의 불안정한 재정상황이 부각되면서 2.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유럽의 금융 불안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리스 사태 외중에 그리스는 중국에 투자를 요청하였고, 중국은 이에 화답하면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14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그리스 사태 이후인 2010년 5월 중국을 방문한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은 외환보유고 운용 시 유로의 비중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0억 달러를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의 투자담당

(Chief Investment Officer) 가오시칭(高西慶) 사장도 2010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대 유럽 투자 비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유럽의 재정적자 규모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한 중국이 유럽 국가들의 정부채권을 일정 부분 소화해주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더뎠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IMF와 ECB가 마련한 구제금융 방안에 따라 국채 인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대형 투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재무부의 미국 국채 국가별 보유현황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5월 기준으로 8,677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미 국채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낮춘 금리로 중국이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국이 미국에 돈을 꾸고 자신의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과 유럽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중국과의 교역관계에서 미국만큼이나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따라서 유럽도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부채 발행이 불가피하다.¹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유럽 국채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는 없는 실정이

★ 중국의 대EU 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2001	40,965	35,639
2002	48,185	38,552
2003	72,080	53,120
2004	104,574	69,179
2005	143,753	73,549
2006	181,927	90,352
2007	245,231	111,041
2008	292,958	132,886
2009	236,346	127,897

자료: CEIC,

¹ 한 국가의 저축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상수지 적지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메워야 한다.

세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1년(-0.4%)보다 크게 악화되었고,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일본(-0.6%), 유로 지역(1.7%)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³

수 있지만 추세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고, 역사적인 환율 흐름을 고려해볼 때, 향후 유로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해 일시적 약세를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 유로 체제의 시장실패 조건 및 전망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구분	1차 약세기 ('71.4~'78.10)	2차 약세기 ('85.2~'95.4)	3차 약세기 ('02.2~'08.3)	4차약세기 ('09.3~현재.)	
촉발계기	닉슨쇼크	플라자 합의	유로화 출범	기축통화 대체논의	
경제편 더 면될	美 쌍둥이 적자	○	○	◎	
	금리	미국>독일	초반:미국>독일 후반:미국>독일	초반:미국<유로 후반:미국>유로	미국<유로
	소비자 물가	독일<미국 <일본	미국> 독일, 일본	미국> 유로존, 일본	미국> 유로존, 일본
국제신인도	달러화	베트남 전쟁, 쌍둥이 적자 ↑ 유럽의 부상	레이거노믹스, 냉전 하 군사비 ↑ 일본의 부상	부시노믹스, 테러와의 전쟁, 쌍둥이 적자, 美금융시스템 불신, 중국의 부상	
도 대체통화	無	無	유로화	SDR, 유로화	

한편, 최근에는 앞의 공통요인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 달러 약세 유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달러화 약세를 초래할 수 있는 미국의 초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 재정위기로 잠잠했던 기축 통화 대체논의⁴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의 신인도도 과거 달러화 약세기보다 약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달러화는 중장기적으로 약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일부 국가의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일시 강세로 반전될

³ Global Insight.

⁴ 2009년에 중국 등 신흥시장과 국제사회는 달러화 기축통화를 IMF의 특별한 출권(SDR)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은 달러화 대신 자국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은 자기들만의 새로운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다. 다만 최근 그리스 사태 이후 PIIGS 국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5월 스페인에서 60억 유로 규모로 발행된 국채 중 중국이 4억 유로 규모의 스페인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그 존재가 부각되었다.²

중국의 대EU 직접투자가 증가할 전망

중국이 EU에 투자를 하는 방식은 위와 같이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도 있지만,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의 형태도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정부의 해외진출 촉진 정책(走出去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에 와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유럽 직접투자는 영국과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에도 일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되는데, 첫째는 자원 추구, 둘째는 시장 추구, 셋째는 기술 추구, 넷째는 효율 추구이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는 시장과 기

술 추구의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의 국가별 투자 상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아울러 중국 해외투자의 특징은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투자를 실제적인 해외 직접투자로 보기는 어렵다.³ 따라서 이를 제외한 투자만을 살펴보면 자원 추구 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의 성장전략을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강력한 임금인상 요구로 나타난 중국 내부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욕구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고부가 산업을 통한 성장으로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국의 접근이 가능한 기업들은 유럽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기업들의 유럽 기업 인수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중국경제의 전환기를 맞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MG Rover의 인수로 주목받은 대영국 투자

1997~2007년 사이에 이루어진 영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투자 중 14%만이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업과 마케팅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수출을 하다가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현지에서 물류와 영업을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직접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투자규모도 크지 않고 고용효과도 크지 않다. 어쨌든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영국이 가장 많은 중국의 해외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이 의류, 신발 등의 경공업에서 기계, IT 및 가전 등으로 발전하면서 대영국 투자 패턴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통신설비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이다. 화웨이는 2004년 유럽 통신산업의 중심지인 영국 남동부

★ 중국의 대유럽 나라별 투자 건수(1997~2007년)

국가	건수
영국	101
독일	40
프랑스	24
스웨덴	15
벨기에	14
네덜란드	10
헝가리	10
이탈리아	8
러시아	7
덴마크	4
스페인	4
폴란드	3
체코	3
불가리아	2
루마니아	2
그리스	1
우크라이나	1
슬로바키아	1
스위스	1

자료: E&Y European Investment Monitor.

런던 인근의 베싱스토크(Basingstoke)에 유럽 본부와 R&D 센터를 설치하고 고용 규모도 최초 200명에서 현재 750명까지 확대하였다. 통신장비제조업체인 ZTE(中興通訊)와 가전업체인 Midea(美的)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대영국 투자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세계의 주목을 받은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보를 비롯한 우수한 자동차 업체들을 인수하려는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그 이전인 2004년에 이미 중국 업체가 영국의 MG Rover를 인수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하려는 전략적 자산 인수였다. 이러한 대형 인수 합병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과거부터 지속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자동차 산업 육성책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당시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는 MG Rover뿐만 아니라 한국의 쌍용 자동차

도 인수하였는데, 이 두 인수합병의 공통점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비교적 싼 가격으로 인수했다는 것과 인수대상 기업이 SUV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 중국의 대영국 전략적 자산인수 사례

인수회사	피인수회사	분야
Greencool Tech	Leyland	자동차
Shanghai Auto	MG Rover blueprints	자동차
Zhenhua Oil	Amion Trading	원유
Nanjing Auto	MG Rover	자동차
Huaxiang Group	Lawrence Auto Interior	자동차

자료: Cross and Voss(2008) 외.

영국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패턴이 모두 나타난 경우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기술인수를 위한 전략적 자산 인수,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자원 확보 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금융산업에 있어 중국이 직접투자를 실행한 사례는 2006년 은행지점을 개설한 것밖에 없다. 중국은 어느 나라에도 은행지점을 개설하는 수준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의 은행을 인수한 것이 예외적 사례의 전부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우선 홍콩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더 커지면서 위안화 표시주식과 채권을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하는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럽의 금융 중심지인 영국으로 중국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대유럽 직접투자 현황(누적)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EU	768	1,275	2,942	3,174
독일	268	472	845	846
영국	108	202	950	838
프랑스	34	45	127	167
스웨덴	22	20	147	158
네덜란드	15	20	139	145
스페인	130	137	143	145
이탈리아	22	74	127	134

자료: 중국 商務部

² 중국은 1~4월 5,410억 엔, 5월 7,352억 엔의 일본 국채를 매입하여 미국 국채 위주의 외환보유고 운용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10년 5월 기준으로 미국 국채 투자규모는 총 8,677억 달러로 여전히 중국의 외환보유고 투자구성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³ 홍콩 및 조세회피지역으로의 직접투자는 다시 중국으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DI)와 중국 내로의 직접투자(IDI) 모두 홍콩과 조세회피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다.



활발한 대독일 직접투자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중국의 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총 투자 금액 측면에서 영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건수 및 투자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독일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수는 1,000개를 초과하고, 그중 민영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국영기업의 비중이 높지만, 이는 중국과 독일의 교역 및 기술교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2008년 기준으로 독일은 중국의 대EU 수출입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독일로부터 도입한 기술계약 건수는 1만 2,568건으로 이 역시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과 운송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기계 및 공구 제조업, 통신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 확대 목적의 투자와 더불어 독일의 선진 기술 분야에서는 전략적 자산인수도 활발하다. 2003년에는 중국의 가전업체인 TCL이 독일의 가전회사 스나이더(Schneider)를, 2004년에는 상하이 망징(明精)공작기계가 볼버그(WOHLemberg)를, 다롄(大連)공작기계가 짐머만(Zimmermann)을 인수하였다. 또 2005년 베이징 기계의 코부르크(Waldrich Coburg), 선양(沈阳)공작기계의 샤이스(Scheiss) 인수 등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독일기업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인수가 활발하다. 2008년에는 중국의 최대 풍력발전 업체인 골드윈드(Goldwind)가 벤시스(Vensys)를 인수하기도 하였다. 독일과의 거래가 활발한 만큼 독일 및 유럽 지역에서의 물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06년에는 중국의 운수업체가 맥켄버스(Mecklenburg-Vorpommern) 주의 파크킴(Parchim) 국제공항을 1.2억 달러에 인수하여 현재 샤먼(廈門) 공항이 위탁관리하고 있다. 한편, 2007년에는 중국의 국부펀드인 CIC(China Investment Corp.)의 설립을 계기로 독일의회에서 해외 국부펀드의 국가핵심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놓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중앙방송(CCTV)은 기술력을 가진 3만개의 독일 중소기업이 중국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특집을 편성하는 등 중국의 대독일 관심도는 높은 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컨설팅업체인 PWC는 중국의 대독일 투자가 향후 10년간 2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프랑스 직접투자

중국의 대프랑스 직접투자는 EU 국가들 중 3위이다. 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영국, 독일과 마찬가지로 초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시장과 기술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프랑스에 투자한 대표적인 중국기업들은 화학의 Bluestar(藍星)그룹, 섬유의 웨이하이(威海) 방직, 통신의 화웨이와 ZTE, 가전의 하이얼(海爾)과 하이센스(海信), 자동차의 Greencool과 Airtac, 중장비의 선양중기(沈陽重機) 등이 있다. 통신, 화학과 기계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생산하고 있기도 하다. TCL은 일찌감치 프랑스에 들어와 2개의 기업을 인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중국의 대영국 전략적 자산인수 사례

인수회사	피인수회사	분야
Greencool	Euro-Hose Tuyaux	자동차
TCL	Thomson TV	TV
Chalkies	Le Cabanon-Conserves	농산물
TCL	Alcatel Mobile	핸드폰
Neo Neon	LCX-Leblanc Chromex	조명
Bluestar	Adisseo	화학
Bluestar	Rhodia Silicons	화학
Senyang H.M.	NFM Tech	중장비
Tianshui S. M.	Somab	정밀기계
Hebei Hongye M	Two Cast Eu.	주조
Weichai P.	Moteuers Baudouin	디젤엔진
Longsheng E. I.	Plysorol SAS	폴리우드

자료: IE Programme Paper, (2010).

중국의 대프랑스 투자는 단기간 내에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기술보다는 문화가 발달

한 나라로 중국인에게 각인된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 TCL의 대규모 직접투자 실패 경험,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프랑스 투자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과 프랑스 간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구조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프랑스는 중국에 9억 유로를 수출하고 19억 유로를 수입한 반면, 독일은 수입 51억, 수출 39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특색 있는 대스페인과 이탈리아 투자

중국과 스페인의 수출입을 합한 교역규모는 2003년 5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2008년에는 250억 달러를 초과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2008년 기준으로 스페인은 유럽 지역에서 중국의 6대 직접투자 대상국이었는데, 2003년에는 1억 달러 규모로 1위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스페인 교역 증가와 투자는 스페인 정부의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국기업을 현지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도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 현지 화교들이 운영하는 사양산업과 서비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항구 인근의 운송이 편리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기업들이 중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 스페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을 이용하여 일부 가공한 후 다른 EU 국가로 수출하는 교역 패턴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스페인 직접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스페인 투자 비중을 보면 76%가 유통업 등의 서비스업에 치중해 있고, 나머지 24%가 제조업이며, 제조업의 68%는 의류, 섬유 업종이다.

중국의 대스페인 직접투자는 2003년 1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2008년 1.5억 달러로 5,000만 달러 증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EU에서의 순위도 1위에서 5위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스페인 정부는 중국, 스페인과 남미 간의 소위 '삼각경제관계'를 추진하여 중국의

⁴ 그러나 스페인 현지에서는 스페인에서 중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미로 진출하는 이러한 형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한다.

직접투자 유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스페인에 합작사를 세우고, 합작사를 통해 중국기업이 남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인데, 이미 남미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기업들을 통해 중국기업들의 남미진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화웨이는 남미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Telefonica, 금융회사인 CITIC(中信)은 대형은행인 BBVA(Banco de Bilbao y Vizcaya Argentaria)를 통해 각각 남미에 진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스페인 정부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러한 스페인과 중국 기업의 협력관계가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⁴

향후 중국의 대스페인 투자는 스페인이 재정위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여 중국의 수입시장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스페인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직접투자를 유인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영 부문의 과다한 비중, 낮은 R&D 규모, 인프라 미비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자동차, 의류, 섬유, 기계류 및 가전에서의 경쟁력과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물가수준은 중국과 같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작용한다.

★ 중국의 대이탈리아 전략적 자산인수 사례

인수회사	피인수회사	분야
Haier	Meneghetti	백색가전
Wenzhou Hazan	Wilson	섬유
Quianjing	Benelli	오토바이
Feidiao Elec.	Eilos	백색가전
Hunan Sunward.	HP Europe Spa	기계
Xinyu Hengdili	Omas sri	장신구
Haier	Elba	백색가전

자료: IE Programme Paper, (2010).





한·EU FTA 체결에 따른 EU의 양자 세이프가드 규칙 제정 동향

Safeguard clause in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European Union – Korea Free Trade Agreement is expected to come into effect by the end of this year at the earliest. The European Parliament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has recently given its approval to draft legislation implementing a safeguard clause in the agreement. The objective of this clause is to provide the Parliament and any industries affected by increased imports the right to initiate investigations into the need for emergency measures. The Parliament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alter the contents of the FTA, yet the Parliament has codecision power when defining implementing policies in the field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uch as the safeguard clause. The European Commission submitted a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9th February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s report was adopted on 23rd June.

한·EU FTA 협상 타결 이후 경과

한국과 EU는 FTA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2개월 만인 2009년 7월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협상 막바지에는 원산지 기준과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하였지만, 한국정부가 일부 소극적인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상외교를 펼치며 노력한 결과 최종 입장 조율에 성공하였다.

당초에는 11월 가서명을 거쳐 2010년 초에 정식서명을 하고 각자 비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9년 말 리스본조약 발효와 2010년 초 새로운 EU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유럽의회 인준 과정을 거치며 EU 측의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 예상보다 상당히 지체되었다. 또한 EU 공식 언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¹ 최근까지는 공식 언어로 번역된 협정문의 법적일치성 검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월 초 양국 수석대표 간 회의를 통해 공식서명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면 하계휴가가 완료된 후 EU 측 최종 의견조율을 거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무리 없이 거친다면, 한·EU FTA는 빠르면 2010년 말경, 늦어도 2011

년 초에는 잠정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내용

한·EU FTA 제3장(Chapter)은 무역구제를 다루고 있으며, D절(Section)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양자세이프가드(A절), 농업세이프가드(B절), 다자세이프가드(C절), 제도규정(E절)에서 세이프가드를 다루고 있다.

양자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치 발동 시 MFN 세율 또는 양허 스케줄상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² 단, 이 양자세이프가드는 관세 철폐 후 10년까지 발동할 수 있다.³ 농업세이프가드의 경우 일부 민감 농산물을 미리 설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다.⁴ 단, 앞서 언급한 양자세이프가드조치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과 EU 모두 WTO 협정상의 다자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나, 양자와 다자 조치를 동시에 발동할 수는 없다.⁵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는 FTA 분쟁해결제도의

¹ EU의 공식 언어는 총 23개이다. 영어를 제외한 22개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아일랜드어 번역을 생략하기로 함에 따라 한·EU FTA는 한국어를 포함해 총 23개 언어본이 정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² 한·EU FTA 3.1조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³ 한·EU FTA 3.5조 "정의" 중 "잠정기간".

⁴ 한·EU FTA 3.6조 "농업세이프가드조치".

⁵ 한·EU FTA 3.7조 "다자세이프가드조치" 4항.

중국을 백색가전, 자동차, 의류, 전기전자,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탈리아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 목적은 영업과 마케팅 지원이 가장 많지만 현지 제조 및 R&D를 위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탈리아 진출의 주요 배경으로 시장규모와 발전가능성을 꼽았다. 하이얼은 기술 습득과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2001년과 2009년에 현지 가전업체를 인수하였는데, 현재 하이얼은 유럽 본부를 이탈리아에 두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창안과 Jac Anhui Janghuai가 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인 투린(Turin)에 R&D와 디자인 센터를 두고 있다. 오토바이 업체인 베넬리(Benelli)를 인수한 첸장(錢江)그룹은 이탈리아 진출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브랜드와 유통망 확보를 들었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가전, 의류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과 지명도를 가진 소규모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중국의 기업들에게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이렇듯 이탈리아와 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이탈리아의 보완기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이탈리아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남중해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중간 큰 분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갈등이 고조된다면 경제부문으로의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EU는 중국에게 더욱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어 EU는 미·중 갈등의 중재자로, 또한 외환보유고 운용대상 및 대 중국 기술협력과 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

엄정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양자세이프가드 조치와 농업세이프가드조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한·EU FTA 분쟁 해결 규정에 따르면, 특정 조치가 FTA와 WTO 규범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는 FTA의 분쟁 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 중 선택할 수 있다.⁶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양자세이프가드

규칙 제정 동향

EU는 최종적으로 이사회와 의회의 공동결정 절차를 거쳐 한·EU FTA를 확정하게 된다. 현재 EU는 한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역내 산업과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EU FTA의 양자 세이프가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의 규칙”(이하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FTA 협정문 자체에 대해서는 유럽의회가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나, 이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은 역내법이므로 의회가 제정 과정에서 다른 공동체 기관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선 EU집행위원회는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안)⁷을 작성하였다. EU집행위원회는 제안서에 대한 Non Paper⁸에서 동 규칙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처음으로 FTA 체결에 따른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이 도입된다.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RTA) 중 과거에 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체결한 협력협정(AA)을 개선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대해 양자세이프가드 이행규칙⁹을 제정한 바 있으나, FTA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례이다. 둘째, 다자세이프가

드의 경우 발동 절차가 보다 완화된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다자세이프가드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¹⁰에서는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에 따라 합의해야만 도입할 수 있으나,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안)에 따르면, EPA 양자세이프가드 이행규칙에서와 같이 가중다수결로 의결해야만 집행위의 양자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한·EU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EU에게도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규모, 교역규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EU는 한·EU FTA가 EU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안)은 이러한 EU 역내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내용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회 수정안의 문제점 및 향후 일정

EU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안)은 이사회를 거쳐 2월 9일 유럽의회에 제안되었다.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약칭 INTA)는 3월 17일 파블로 잘바 비데가인 의원(Pablo Zalba Bidegain, EPP 소속, 스페인)을 동 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 특별보고자(Rapporteur)로 임명하였다. INTA는 3월 17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EU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한 독회(reading)을 가졌고, 잘바 비데가인 의원은 검토보고서 초안을 5월 12일 INTA에 제출하였다.

당초 EU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양자세이프가드 규칙(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보고자가 제출한 보고서 초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추가하는 등 29개의 수정조항을 제시하였다. 동 초안이 수정한 내용의 특징은 기존 세이프가드 관련 EU 규칙과의 일치, 모호한 규정의 명료화, 유럽의회 및 관련 산업계의 참여

기회 확대, 절차적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EU FTA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내용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규칙으로 관세 환급을 연계시키고 있는 점이다. 한·EU FTA는 소위 ‘관세 환급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한 ‘세이프가드’란 용어는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세이프가드조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FTA가 발효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방 당사국이 관세 환급 제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검토한 결과 관세 환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이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잘바 비데가인 의원의 수정안에 따르면, 관세 환급을 다루기 위한 장치가 5년 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관세 환급으로부터 발생한 외곡을 해결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¹²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EU집행위원회 안에서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과정에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정안은 유럽의회와 산업계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보고자 보고서 초안 제출 전 두 차례의 독회를 가진 것에 더해 INTA는 6월 1일 초안을 놓고 한 차례 더 토의를 가졌다. 이 세 차례의 토의 과정에서 특별보고자 보고서 초안의 수정 사항 외에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100건 이상을 수정 및 추가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내용이 상세히 알려지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 제한 반대, 제3국

이 FTA의 간접적 혜택을 받을 경우 고려, 수입 감시 강화, 지역 세이프가드조치(regional safeguard measure) 도입, 세이프가드조치 기한 연장, 노동, 환경, 비관세장벽(NTB) 영향의 피해조사 반영 등이다.

INTA는 6월 23일 찬성 27표, 반대 0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고서 초안은 29개의 수정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토의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여 54건의 최종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이 중 FTA 협정문에 상충하는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의 무기한 연장¹³이나 조치 발동 기한의 최대 8년까지 연장¹⁴과 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한·EU FTA, WTO 세이프가드협정 등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규범 충돌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로 한국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노동, 환경, 비관세장벽 등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 행위(economic activity)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무역장벽(trade barriers)으로 인한 수출지원¹⁵,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제 행위¹⁶, (한·EU FTA 13장의) 사회(노동)적 의무나 환경 관련 의무 위반¹⁷,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정 의무 위반¹⁸ 등에 따른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비관세조치의 경우 한·EU FTA상의 비관세조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개절차¹⁹를 두고

⁶ 한·EU FTA 22.6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⁷ European Commission (2010). COM 2010 (49 final).

⁸ European Commission (2010). Non Paper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implementing the bilateral safeguard clause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⁹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2007). Council Regulation(EC) 1528/2007.

¹⁰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2007). Council Regulation(EC) No 260/2009.

¹¹ 한·EU FTA 원산지규정의정서 14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

¹² INTA, European Parliament (2010. 5. 12.)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implementing the bilateral safeguard clause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Amendment 3.

¹³ 한·EU FTA에서는 관세철폐 후 10년간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¹⁴ 한·EU FTA와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세이프가드조치를 2년간 발동할 수 있고,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추가로 2년간 더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¹⁵ INTA, European Parliament (2010. 6. 23.)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implementing the bilateral safeguard clause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이하 INTA 보고서), Amendment 1.

¹⁶ 위의 책, Amendment 2, 23.

¹⁷ 위의 책, Amendment 3.

¹⁸ 위의 책, Amendment 4, 38.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제3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이들 국가의 노동 및 환경 관련 국제기구(ILO, UN)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²⁰ 둘째, 관세 환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그 전에 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제3국간의 관련 교역 흐름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 셋째,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규칙에서 경쟁법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다. INTA 보고서는 한국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EU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한국 당국(공정거래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거로서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유럽 자동차의 시장진입이 제한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과 논거를 세이프가드조치 규칙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밖에 당초 특별보고자 초안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유럽의회와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은 당장 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세이프가드조치 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수정 보고서가 INTA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EU 측 산업계는 여전히 일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특별보고자를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동 세이프가드 규칙 제정을 통해 한·EU FTA의 유럽의회 동의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3자 간 협의를 거친 후 하계휴가

가 완료되는 시점인 9월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규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 세이프가드규칙 제정을 통해 한·EU FTA잠정적 용에 대한 EU 측 정치적 환경은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NTA 수정 보고서상의 규칙(안)은 한·EU FTA와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규칙(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닌 만큼 향후 EU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의 3자 논의 과정과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의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규칙이 제정된 후,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협정 위반 가능성을 따져 FTA 분쟁해결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 등을 통해 한·EU FTA에서 우리가 얻을 실익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²²

금융위기로 인한 유럽 은행산업의 판도 변화

Reconfiguration of EU banking scene after financial crisis

The volume of international cross-border bank lending is dominated by EU banks and their commercial bank assets are almost four times larger than the US'. Due to its size,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has been significant in Europe's banking sector with European banks accounting for over half of total estimated bank writedowns and loan provisions between 2008 and 2010. There are clear winners and losers coming out of this crisis. The number of European banks in the top 30 world banks based on market capitalization has declined from 16 in 2006 to 10 in 2010, while the number of Chinese banks has increased from 0 to 5. The EU's bank industry is expected to face further some problems. EU banks will experience some liquidity problems as \$3.4 trillion of EU's bank debt is due to mature between 2010 and 2012. There are additional uncertainties such as EU governments adopting new regulations to fix the "too-big-to-fail" problem and withdrawing their support from the financial market as they try to repair their public finances.

세계 은행산업의 판도 변화

2007년 *Financial Times*(FT)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글로벌 은행은 82개에 달했으며, 이들의 시장가치는 총 5조 달러가 넘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은행산업은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2007년 2/4분기~2009년 1월 사이 RBS(영국), 씨티그룹(미국), 바클레이즈(영국), 도이치뱅크(독일)의 시장가치가 80% 이상 감소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으며¹ 은행들의 세전수익은 2007/2008년 7,810억 달러에서 2008/2009년 1,150억 달러로 85.3% 하락했다. 투자자본수익률 또한 20.02%에서 2.69%로 급락했다.² 그 결과 2009년 FT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은행은 단지 56개에 불과했으며 시장가치는 2007년 대비 61.3% 하락한 1.9조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은행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0년 FT 500대 기업에 포함된 은행들의 시장가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조 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기업들을 살펴보면 은행산업의 판도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미국 은행들이 상위권으로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 은행들의 부상이 눈에 띈다.

2006년 FT가 선정한 10대 은행에는 미국 은행이 4개, 영국과 일본 은행이 각각 2개, 스위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이 각각 1개씩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미국 은행이 4개, 중국 은행이 3개, 그리고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은행이 각각 1개씩 포함되었다.

2008/2009년 세전수익에서 1,460억 달러를 기록한 아시아 은행들은(일본은 제외)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³ 당시 중국 은행들은 840억 달러의 세전수익을 기록한 반면 EU 27과 미국 은행들은 각각 160억 달러, 91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⁴ 이어 2010년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 건설은행의 시장가치는 각각 2,464억 달러, 1,9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은행권 1, 2위(전체 4위, 11위)를 차지했다.⁵

유럽 은행산업 규모 및 피해 현황

2010년 FT가 선정한 500대 유럽 기업 중에는 61개의 은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시장가치는 총 1.56조 달러에 이른다. *The Banker*지에 따르면 2009/2010년 세계 1,000대 은행의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달러 가까이 하락한 95.5조 달러를 기록했다.

³ Top 1000 World Banks. (2010. 7.). *The Banker*.

⁴ 2008/2009년 세전손실 상위 10대에 독일은행이 3개, 영국, 미국, 스위스 은행이 각각 2개씩, 벨기에 은행이 1개 포함됨.

⁵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 건설은행은 수익 측면에서도 2009/2010년 각각 245억 달러, 203억 달러의 세전수익을 기록하며 나란히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함.

¹ 각 은행들의 시장가치는 96%, 92%, 92%, 85% 감소. (Bloomberg).

² 투자자본수익률=세전수익/기본자본. (IFSL Research (2010.2.). Banking 2010.)

¹⁹ 한·EU FTA 부속서 14-A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제도".

²⁰ 앞의 책, Amendment 13.

²¹ 위의 책, Amendment 11, 29.

²² 본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단체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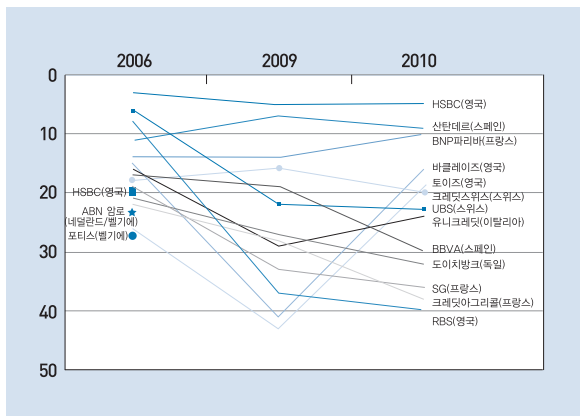
세계 총 자산에서 유럽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였고 미국, 일본, 중국 은행은 각각 13%, 10%, 9%를 차지했다. 이는 유럽 은행들의 해외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09년 말 전 세계 은행의 해외 대출규모는 21.6조 달러였는데, 이 중 유럽은행과 미국 은행은 각각 59.6%와 14.2%를 차지했다.⁶ 단 일국가로는 영국이 20.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로 인한 유럽 은행산업의 피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2/4분기~2009년 4/4분기 사이 전 세계 금융권의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은 1조 5,550억 달러였고 유럽에서만 8,52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0년 전 세계 예상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은 총 7,210억 달러이며 유럽에서만 4,24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지역과 영국의 총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에서 해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4%와 44.6%로 매우 높다. 기업 대출은 각각 11.9%와 13.8%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EU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로지역에서는 주택 모기지 증권(15.7%)이, 영국에서는 소비자 대출(14.0%)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⁷

유럽 주요 은행의 순위 변화

이러한 글로벌 은행산업의 변화 속에서 유럽 은행들의 시장가치 순위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HSBC(영국)는 중국 은행들의 약진으로 몇 계단 하락했으나 여전히 유럽 최대의 은행 자리를 지켰으며, 방코산탄데르(스페인)와 BNP 파리바(프랑스)의 순위는 위기 이전보다 상승하며 일본 은행들의 빈자리를 꿰

★ 유럽 은행들의 시장가치 기준 순위 변화(은행권 순위)



주: 2006년 상위 30대에 포함된 16개 유럽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40위→31위→26위로 상승하며 상위 30위에 진입.
자료: Financial Times (2006, 2009, 2010.), Global 500.

쳤다.⁸ 바클레이즈(영국)와 유니크레딧(이탈리아)의 시장가치는 2009년에 크게 하락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크레디트스위스(스위스), UBS(스위스), BBVA(스페인), 도이치방크(독일), 크레딧 아그리콜(프랑스), SG(프랑스), RBS(영국)의 상황은 2009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2006년 세계 20위 은행이었던 HBOS(영국)는 로이즈TSB(영국)에게 2009년 1월 합병되었으며, 합병 이후 로이즈TSB는 로이즈은행그룹으로 이름을 바꿨다. 로이즈은행그룹의 시장가치는 세계 43위까지 하락한 후 2010년 19위로 급등했다. ABN암로(네덜란드)와 포티스(네덜란드/벨기에)는 국유화되었고 2007년 RBS가 인수한 ABN암로의 일부사업은 영국정부가 RBS의 지분을 사들이며 영국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세계 30대 은행에 포함된 유럽 은행은 2006년 16개에서 2010년 10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The Banker지가 발표한 2009/2010년 기본자본(Tier 1 Capital) 기준 세계 1000대 은행의 상위 10위에는 5개의 EU 은행이 포함되어 있다.⁹ RBS와

⁹ 전 세계 1000대 은행 기본자본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9조 달러를 기록. 미국 은행이 4개, 중국 은행이 1개 포함되어 있음. 상위 3대 은행은 모두 미국 은행들이 차지.

HSBC는 전년과 동일하게 세계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BNP 파리바(14위→8위), 방코산탄데르(10위→9위), 바클레이즈(15위→10위)는 2009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로이즈은행그룹의 순위는 36계단 상승한 12위로 평가되었다.

2009/2010년에는 전 세계 은행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4배 규모인 4,010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고 투자자본수익률은 8.16%를 기록했다.¹⁰ 2008/2009년에 손실을 기록하였던 EU27 은행권은 2009/2010년에는 1,038억 달러의 세전수익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즈는 EU에서 가장 큰 규모(세계 4위)인 189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나 RBS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43.7억 달러의 손실을 내며 기본자본 순위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방코산탄데르, BNP 파리바, 크레디트스위스, BBVA의 수익규모는 각각 세계 6위, 9위, 11위, 12위였다. 유럽 은행 중 아일랜드와 독일의 은행들이 큰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앵글로 아이리시은행(아일랜드)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185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 독일의 코메르츠뱅크와 바이에른 란데스뱅크는 각각 5번째와 10번째로 큰 손실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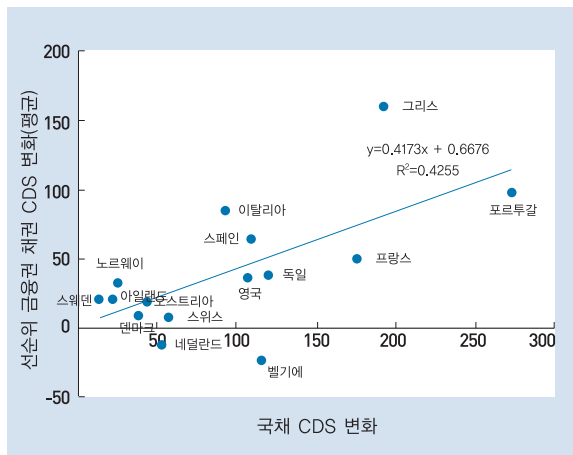
유럽 재정위기가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금융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재정위기로 인해 국채가 격이 급락할 경우 국채가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더불어 국채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재정위기가 심화될수록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빨리 철회될 수 있다. 2009년 말과 2010년 초의 국채와 금융권 채권 CDS 변화를 비교해보면 유럽 국가들의 재정불안이 금융권으로 번진 것을 알 수 있다. EU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¹⁰ 세전수익 기준 세계 10대 은행에 미국, 유럽, 중국 은행이 각각 3개씩, 브라질 은행이 1개 포함되어 있음.

막기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주요국들은 재정긴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는 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재정불안은 당분간 계속 은행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채 및 금융권 채권 CDS 상관관계 (%)



주: 1) 2009년 10월과 2010년 2월 사이의 변화.
2) 최근 IMF (2010. 7.), GFSR Update,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의 상관관계는 더욱 높아짐.
자료: IMF (2010. 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한편 유럽 은행들의 유럽 국채 보유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9년 말 유로지역 은행들의 對PIGS 국채 익스포저 규모(위험 노출액)는 2,540억 달러(총 익스포저의 16% 수준)였다.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의 對PIGS 국채 익스포저 규모는 각각 1,060억 달러와 6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은행들의 익스포저를 종합해보면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12.1%, 8.3%, 5% 수준으로 매우 높다.¹¹ IMF에 따르면 해

¹¹ 영국 은행의 익스포저는 각 2.0%, 0.8%, 0.7%. 미국은 모두 1% 미만을 기록. (BIS (2010. 6). BIS Quarterly Review- Highlights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activity.)

⁶ BIS (2010. 6.). BIS Quarterly Review, Table 3A: External loans and deposits of banks in all currencies vis-a-vis all sectors. 유럽 은행은 BIS에 보고하는 18개 유럽 국가 기준.

⁷ IMF (2010).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4위→23위→15위,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9위→34위→45위로 하락.





외 은행들의 국제보유량은 국제발행국의 CDS 스프레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¹² 따라서 당분간 유로지역 국제 CDS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PIGS 국가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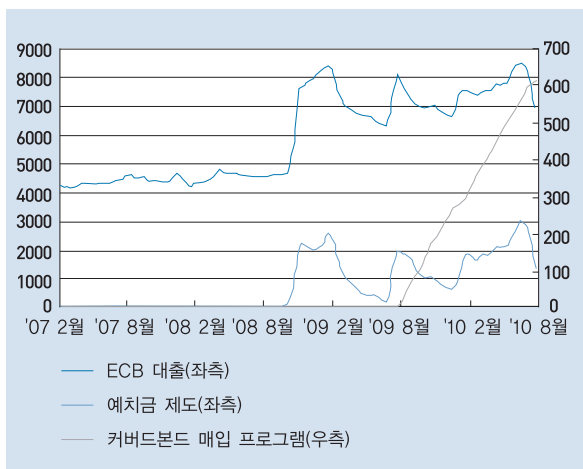
유럽 금융시장 자금경색

2008/2009년 EU 은행산업의 예대율은 121%로 미국(100%)과 일본(76%)에 비해 훨씬 높았다.¹³ 국가 재정난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진 남유럽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에 손을 벌렸다. 이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지역 은행권에 대출해준 자금은 2008년 6월 4,830억 유로에서 2010년 5월 8,150억 유로로 급증했다. 특히, ECB 대출증가의 68%에 해당하는 2,250억 유로가 PIGS 국가들의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PIGS 국가들이 유로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18%에 그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는 매우 큰 규모의 자금 수혈이다.

6월 30일 ECB의 은행권 대출규모는 ECB 창설 이래 최고치인 9,105억 유로를 기록했다. ECB가 초저금리로 금융권에 제공했던 4,420억 유로 규모의 1년물 대출 만기가 7월 1일자로 다가오자 ECB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으나, 결국 금융권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6월 30일 1,319억 유로 규모의 3개월물 대출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2,500억~3,000억 유로 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년물 대출규모는 은행 1곳당 3.94억 유로(1,121개 은행)였던 반면 3개월물 대출규모는 7.71억 유로(171개 은행)로 소수은행들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7월 1일 ECB는 1% 금리로 6일짜리 초단기 자금지원

을 요청 받고 78개 은행에 1,112억 유로를 대출해주었다. 157개 은행은 1,629억 유로 규모의 1주일물을 추가 대출받았다.¹⁴

★ ECB 시장 유동성 제공 및 예치금 현황 (억 유로)



주: 30일 평균.
자료: ECB (2010.), Monetary policy: Historical data on daily liquidity conditions.
(<http://www.ecb.int/mopo/implementation/sf/html/index.en.html>)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높았다는 것은 소수은행들이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단기대출을 지원받은 은행 중 다수가 남유럽 국가의 은행으로 추측된다. 또한 0.25%의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6월 13일 은행들의 ECB 하루 예금규모는 3,843억 유로를 기록했다. 정확히 1년 전 하루 예금 규모가 113억 유로였던 것을 비교해볼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월 8일 3개월물 유로 리보금리¹⁵는 시장의 불안함을 반영하며 1년 이래 최고치인 0.905를 기록했다.

¹² CDS 스프레드=-2.35경상수지+4.45재정건축규모+4.14해외국채 보유규모, n=24, (IMF (2010. 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¹³ 예대율은 유동성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2008/2009년 세계 평균은 104%. (IFSL Research (2010,2.), Banking 2010.)

¹⁴ 6월 30일과 7월 1일 사이 ECB의 은행권 신규대출 규모는 4,061억 유로로 7월 1일 만기인 1년물 대출규모와 비슷한 수준.

¹⁵ Euro Interbank Offered Rate(Euribor): 유로존 은행 간 대출금리. (www.euribor.org).

또한 유럽 은행은 달러화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유럽은행은 7조 달러 규모의 美 달러화 표시 자산을 조달하는 데 외환 스와프 시장에 크게 의존하였고, 또한 美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을 위해서도 외환 스와프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2009년 말 롱-달러 유럽 은행들의 단기 달러 펀딩 갭¹⁶은 최소 8,200억 달러, 최고 3.9조 달러였고 숏-달러 유럽 은행들의 단기 달러 펀딩 갭은 최소 3,000억 달러, 최고 1.8조 달러였던 것으로 추산된다.¹⁷ 즉, 유럽 은행이 보유한 달러화 자산과 부채가 미스매치 되고 있다. 달러 펀딩 갭이 최고치에 도달한 것은 롱-달러 유럽 은행권이 2007년 중반이고, 숏-달러 유럽 은행권은 2008년 말이었다. 수치는 각각 1조~5조 달러와 4,000억~2.1조 달러의 수준이었다. 최근 달러 펀딩 갭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2000년대 초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달러자산 가격의 하락세로 인해 유럽 은행은 달러화 자산 매각을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단기자금 및 파생상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단기 금융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위기가 가중되며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은행들의 달러화 단기자금 조달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총 5.1조 달러 규모의 은행권 부채가 만기에 도래한다. 이 중 유로지역 은행과 영국 은행들의 부채가 각각 46.4%와 20.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따라서 유럽 은행들이 자산을 축소하거나 신용 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자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¹⁶ 펀딩 갭은 단기부채와 단기자산의 차이로 최고치는 비금융권 부채를 단기로 가정하여 산출.

¹⁷ 롱-달러 은행은 금융위기 시작 당시 달러화 자산이 달러화 부채보다 큰 국가의 은행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은행들이 포함됨. 숏-달러 은행은 달러화 부채가 달러화 자산보다 큰 국가의 은행으로 11개 유럽 국가의 은행이 포함됨(BIS (2010. 6.), BIS Quarterly Review- European banks' US dollar pressures.)

¹⁸ IMF (2010. 4.),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유럽 은행의 심각한 對민간부문 익스포저

유로화의 탄생과 함께 유럽 채권시장이 통합되며 유로지역 은행들의 리스크가 역내에서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 말 해외은행들의 PIGS 국가들에 대한 익스포저 중 유로지역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했다. 유로지역 은행들의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는 각각 7,270억 달러, 4,020억 달러, 2,440억 달러, 2,060억 달러다.¹⁹ 그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정부 재정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유럽 은행들의 민간부문에 대한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은 유로지역 은행들의 對PIGS 익스포저의 61%에 해당하는 9,580억 달러(각각 4,930억 달러와 4,650억 달러) 규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스페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는데(각각 2,480억 달러와 2,020억 달러), 프랑스는 스페인의 비금융 민간부문에 대한 익스포저(970억 달러)가, 독일은 對스페인 금융권 익스포저(1,090억 달러)가 높다. 또한 독일의 對아일랜드 익스포저는 1,770억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중 3분의 2를 비금융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영국 은행의 아일랜드와 스페인에 대한 익스포저는 각각 2,300억 달러와 1,400억 달러이며, 비금융 민간부문 익스포저는 각각 1,280억 달러와 790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부채감축과 재무제표 재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09년 말 스페인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최고치 대비 7%p하락했고 영국의 경우 10%p 이상 하락했다.²⁰ 그러나 현재 두 국가의 처

¹⁹ Ultimate risk basis 사용. 해외대출에 대한 익스포저 외 기타 익스포저에 포함되는 파생금융상품, 지급보증금, 신용위탁도 포함. (BIS (2010. 6.), BIS Quarterly Review- Highlights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activity.)

²⁰ BIS (2010. 7.). BIS 80th Annual Report- From the emergency room to intensive care: the year in retrospect.





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2000년대 초 대비 50%p가량 높은 140%가 넘는다. EU27의 실업률이 9.6%에 육박하고 특히 스페인 실업률이 20%로 심각한 수준²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년간 EU 민간부문의 부채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익스포저가 높은 은행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부실자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6월 기준 아일랜드와 영국의 상업 부동산 가격은 각각 최고치 대비 39%와 46%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4분기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집값은 각각 전년 대비 11.0%, 6.8%, 6.9%, 1.2% 하락했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추가 하락했다.²² ECB는 2011년 유로지역 은행들의 비금융권 민간부문 대출 대손상각 규모가 1,0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³

유럽 은행산업의 미래

2009년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은 2008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유럽 은행권의 CDS 스프레드도 2008년 말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은행들의 신규 대출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정부부채 및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며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은 최근 1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은 10%가 넘고 스위스 주요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은 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재정위기 악화,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민간부문에 대한 익스포저 증가로 유럽 은행산업의 미래가 위

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 은행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한 채권 및 환전거래 수익은 변동성이 높다. 2009년 주요 은행들의 예대율은 하락하였고 유로지역의 비금융 민간부문 대출 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고정수익의 비중이 낮아진 것을 뜻한다. 은행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 창출모델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딥을 우려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ECB는 만기전환수익을 노리는 유럽 은행들에게 단기부채와 장기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8년 말 마이너스였던 유로지역과 영국의 CTR 비율이²⁴ 2010년 초 4.5를 돌파했다. 단기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낮은 금리로 인해 은행들의 부실자산 정리 및 재무제표 개선이 지연되며 금융산업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둘째, 유럽 은행산업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말 EU 내에서 GDP 규모가 가장 큰 독일, 프랑스, 영국의 은행자산은 각각 GDP의 4.6배, 5.6배, 6.3배 이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상위 2대 은행들의 총자산은 각각 GDP의 3배가 넘고 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경우 2배가 넘는다. 스위스 은행자산은 무려 GDP의 6.7배, 상위 2대 은행의 총자산은 4.4배를 기록했다.²⁵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대마불사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그리고 은행

사업부문 분리와 관련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EU 각국들이 상이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는,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금융권 지원규모가 곧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 당시 유럽 각국의 정부는 덩치가 큰 은행들의 파산이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지원책을 선택하였다. 2007년 8월과 2009년 8월 사이 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들의 자산은 각각 총 자국 은행권 자산의 80%, 70%, 55%를 차지했다. 파산 및 국유화된 벨기에와 영국 은행들의 자산은 각각 53%와 26%를 차지했다.²⁶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의 지분을 매입하며 자연스럽게 은행권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해졌다. 영국의 경우, 주요 은행인 RBS의 70%, 로이즈의 43.5%를(2009년 말 기준) 영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타격이 컸던 은행들이 인수 및 합병되며 주요 은행들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로이즈은행그룹, 방코산탄데르, 네이션와이드의 영국 모기지 대출 시장 점유율은 각각 28.6%, 13.0%, 11.1%로 이들을 합치면 총 50%가 넘는다. 주요 은행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이 수수료 및 대출 금리를 담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각국과 EU 차원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말 EU집행위원회는 영국정부의 로이즈은행그룹과 RBS 구제방안을 승인하며 각 은행에게 600개와 300개의 은행지점을 매각하도록 지시했다. 매각을 통해 로이즈의 개인당좌예금 시장점유율은 4.6%p, RBS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점유율은 5%p 감소할 예정이다.²⁷ 또한, 6월에는

영국 경쟁거래소(Office of Fair Trading)가 은행들의 주식발행수수료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EU 은행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이 향후 몇 년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²¹ 6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10.0%를 기록. (Eurostat. (2010.7.30.) Euro area unemployment rate stable at 10.0%.)

²² 2010년 7월 기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각각 11.0%, 4.7%, 4.5%, 4.1% 하락. 2009년 1/4분기 영국, 네덜란드, 독일 집값은 각각 전년 대비 16.6%, 9.9%, 2.8% 하락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Global house prices: Froth and stagnation. (2010. 7. 8.). *The Economist*.

²³ ECB (2010). Financial Stability Report.

²⁴ Carry-to-risk 비율은 10년물 스와프금리와 3개월 단기금융시장금리격차(수익)를 3개월/10년 금리스와프거래옵션 내재변동성(위험)으로 나눈 비율 (BIS (2010. 7.). BIS 80th Annual Report- From the emergency room to intensive care: the year in retrospect)

²⁵ 일본과 미국의 은행자산은 각각 GDP의 3.0배, 1.7배, 상위 2대 은행들의 총자산은 각각 GDP의 0.8배, 0.3배를 기록. (Swiss National Bank (2010). Financial Stability Report.)

²⁶ Laeven, L. & Valencia, F. (2010). Resolution of banking crises: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Working Paper). IMF.

²⁷ EU Commission (2009.11.18.).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restructuring plan of Lloyds Banking Group.; EU Commission (2009.12.18.).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impaired asset relief measure and restructuring plan of Royal Bank of Scotland.





EU의 동물복지정책과 한-EU FTA에 대한 의의

Enhancing cooperation on animal welfare issues through EU-KOREA FTA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various measures aimed at ensuring animal welfare and protection and it plans to define its regulations more clearly in a number of areas such as animal transportation, slaughter, experimentation and conservation. The EU-Korea FTA negotiations have been completed and the agreement has been initialled on 15 October 2009. The agreement's Chapter 5(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tates that it aim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wo economies on animal welfare issues. Article 5.9 states that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expertise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animal welfare, and shall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of animal welfare standards in international fora. It is important for Korean firms to understand EU's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animal welfare and protection.

EU 동물복지정책의 법적 근거

동물복지에 관한 EU의 최초 법률은 1978년 6월에 채택된 「농업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협정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78/923/EEC)」이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EU 차원의 구체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에 부속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된 리스본조약, 특히 「EU의 운영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3조는 “농업, 어업, 운송, 역내시장, 연구, 기술개발, 우주정책 분야에서 EU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 EU 및 회원국은 동물복지 요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since animals are sentient beings, pay full regard to the welfare requirements of animals…)”고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EU와 회원국은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EU는 이미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체

적인 행동계획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가축사육, 도축, 실험 및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에게 동물복지는 아직도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물복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경제적, 윤리적, 법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동물·시민 건강 및 식품생산과도 연계되어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물복지의 개념

넓은 의미의 동물복지(animal welfare)는 동물의 복리를 보장하는 윤리적 책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란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관리, 영양 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 복리의 모든 측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간적인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라는 개념의 확립은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건전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동물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 사육되더라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영양과 휴식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위생이나 질병 예방, 그리고 치료 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동물복

지라 할 수 있다.

위의 개념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동물복지는 동물을 ‘감각 있는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식하고 있고, 주로 인간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동물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인간이 존재하고, 복지의 대상인 그 객체로서 동물이 있다고 보는 시각인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동물복지는 인간이 수행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특히 ‘인도적(humane)’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르게 된다. 동물의 복지를 논하면서도 동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범이 되는 것이다.

EU 주요 동물복지정책의 개요

① 농장에서의 동물복지(Welfare of animals on the farm)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1998년 7월 20일자 이사회 지침 98/58/EC는 식용, 직물용 그리고 어류, 파충류, 양서류를 포함해 농사에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을 근거로 EU는 가축에 대한 네 가지 세부적인 보호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1999년 7월 19일자 이사회 지침 1999/74/EC를 통해 ‘산란계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닭에게 동지를 제공해야 하고, 닭 한 마리당 15cm의 헛대 공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닭들이 쪼고, 굵을 수 있는 깔짚²을 제공해야 하고, 닭장 안에서 자유롭게 먹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둘째, ‘송아지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하는 2008년 12월 18일자 이사회 지침 2008/119/EC는 1998년 1월 1일부터 생후 8주 이후의 송아지는 폐쇄된 개별 축사(confined individual pens)를 사용하

는 것을 금하며, 또 이와 같은 형태의 축사를 신축하거나 혹은 개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은 모든 축사에 적용되고 있다. 이 지침은 개별 축사만이 아니라 집단 축사에서 사육되는 송아지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돼지 보호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정하는 이사회 지침 2001/88/EC는 이전의 이사회 지침 91/630/EC를 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① 교미 후 4주부터 출산예정일 1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신한 암돼지 및 새끼를 낳은 일이 없는 암돼지(pregnant sows and gilts)를 위한 개별 우리의 사용을 금지하고, 또한 밧줄로 매어두는 것을 금지한다. ② 우리 바닥 표면의 질을 개선한다. ③ 암돼지를 위한 가용 생활공간을 확대한다. ④ 암돼지가 코로 땅을 파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rooting) 음식을 제공하는 등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신축 혹은 개축된 우리에만 적용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우리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넷째, 육계, 특히 ‘브로일러(broiler)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는 2007년 6월 28일자 이사회 지침 2007/43/EC는 평방미터당 33kg 혹은 39kg(33kg/m² or 39kg/m²)의 최대수용밀도(maximum stocking density)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 닭장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② 운송 중 동물복지(Welfare of animals during transport)

유럽이사회는 동물복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EU의 동물운송규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운송 중인 동물보호에 관한 규칙 1/2005를 2004년 12월 22일자로 채택했으며, 2007년 1월 5일부터 발효하여 시행하고 있다. EU가 이 규칙을 마련한 목적은 동물들이 운송 중에 겪게 될 위험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규칙 1/2005에는 동물

¹ 현재 EU는 「2006~2010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공동체 행동계획 (Community Action Plan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2006-2010)」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² 동물 우리의 바닥에 까는 짚이나 톱밥.



수송 차량과 시설에 대한 높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송 중에 동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아래와 같은 엄격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8시간 이상 동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차량은 개량한 후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시설들은 동물에게 더 잘 맞는 미세 환경(기후) 조절 기능과 엄격한 급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갓 태어난 동물이 나 출산한 지 1주일 이내의 암컷은 운송이 금지된다.

둘째, 동물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008년부터는 동물 취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운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업자, 운전자, 운송 중 각 지점의 관련자들 모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동물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특히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므로 이와 관련한 취급 규정들과 승하차 시설의 필요 조건에 대해 제정하였다.

셋째, 동물을 8시간 이상 장거리 운송하는 경우 차량에는 운송 및 휴식시간에 대한 EU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성항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트럭들은 2009년까지 이 시설들을 장착해야 한다.

③ 도축 시 동물복지(Welfare of animals at slaughter) 도축에 관한 EU의 법률은 과학적 지식과 실제 경험에 의거하여 기절(氣絶) 등과 같은 도축방식을 사용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도축 전 동물을 기절시키는 것에 관한 EU 차원의 최초 입법은 이사회 지침 74/77/EC였으나, 이는 이사회 지침 93/119/EC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2008년 9월 18일 EU집행위원회는 이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였고, 2009년 9월 24일자 이사회 규칙 1099/2009로 채택되었다. 이 새로운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업체는 적절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작업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적절한 지표를 통해

기절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도축장을 설계할 때는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하며, 연간 1,000마리 이상의 가축 또는 15만 마리 이상의 닭을 도축하는 도축장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숙련된 동물복지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기절장비 생산자는 적절한 동물복지를 준수할 수 있는 사용자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과학적 진보에 맞추어 기술표준도 갱신해야 한다.

④ EU 회원국은 신규 도축장 건설과 신규 기절장비 및 시설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연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④ 개·고양이가죽의 사용금지(Ban on cat and dog fur) 2006년 11월 20일 EU집행위원회는 EU 역내에서 개와 고양이 가죽의 수입, 수출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논의되었으며, 공동결정 절차에 회부되었다. 2007년 6월 19일 유럽의회는 합의문을 승인하였고, 유럽이사회와 EU집행위원회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2007년 12월 11일자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1523/2007이 채택되었다.

규칙 1523/2007이 채택된 배경에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의 목표는 해당 물품이 개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유럽 역내시장이 기능하는 데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 개와 고양이 가죽 및 그 가죽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수입과 수출, 그리고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EU집행위원회에 이 규칙의 이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EU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관세조치활동을 포함하여 이 규칙의 실시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는 유럽시민에게 공개된다.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의의

한-EU FTA 논의 과정에서 동물복지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7년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협상에서였다. 당시 한국 협상단은 자동차와 지적재산권 등 일반적인 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갔다. 그런데 갑자기 EU 측에서 “한국에서는 닭들이 학대받고 있다. 한국 닭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도축 과정도 불투명하다. 동물복지가 보장되지 않은 축산물을 수입하기 곤란하다”며 ‘동물복지’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³ 그 결과 가서명된 한-EU FTA 협정문에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관한 제5장의 제9조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에 관한 두 개의 조문을 담게 되었다. 위의 조항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동물복지 분야에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동물복지) 활동을 위한 작업계획을 채택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국제포럼에서 동물의 기절 및 도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동물복지 기준 개발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판단해보면 예상과는 달리 협상 과정에서 EU가 한국에 대하여 EU 수준의 동물복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EU FTA 발효 이후이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통상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행복추구권이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이제는 동물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동물복지란 바로 동물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것인 동시에 ‘행복하게 살고(사육되고), 죽을(도축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반려동물에게 주로 인정하던 이 권리를 이제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에게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동물복지가 이와 같은 철학적·윤리적 차

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교역적 통상장벽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둘째, 동물복지 문제는 WTO 차원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국제적 통상 현안이다. 앞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기준이 마련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다면 한국 축산농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셋째, 동물복지형 사육을 실시할 경우, 생산비 상승과 소비자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⁴

마지막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복지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당장 EU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동물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한국 축산업의 생산시설과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적·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³ “가축 학대 그만” 동물복지 시대 열린다.” (2007. 12. 11.), 『조선일보』.

⁴ 예를 들어, EU는 닭을 밀집형 양계사가 아닌 개방형 양계사에서 사육할 경우 달걀 한 개당 15원, 완전 방사할 경우 26원의 생산비가 인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 연구보고서는 동물복지가 도입되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17~53%, 쇠고기가 34~95%, 닭고기는 16~51% 오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려면 토지 면적이 지금보다 돼지는 1.28배, 한우는 2.25배(번식우 기준) 더 필요하고, 산란계는 5.36배 더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유럽의 사례와 함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European approach

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ised, the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becoming an important strategy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responsibility of companies to satisfy stakeholders, not just shareholders, has been emphasised in many EU countries where the idea of stakeholder capitalism has been widely accepted. Companies which follow the CSR integrated business model would embrace responsibility for the impact of their activities on all members of stakeholders such as the environment, consumers, employees and communities. The European Union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CSR and the Commission has called on the European business to step up its commitment to CS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Many EU member states have adopted policies and regulations supporting the practice of CSR. We can look at one of the largest German corporations, Siemens, to see how major EU corporations are changing their business models to satisfy stakeholders and take actions to protect their societies and environment.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범위가 다양해지고, 기업 활동이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지지가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CSR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 사회적 신뢰 획득 등 장기적으로 기업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CSR의 중요성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심화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이 확산되면서 더욱 강조되어 왔다.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CSR에 주목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CSR 활동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사회공동체의 착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CSR을 경영전략의 하나로 본다면, ‘착한 기업’,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공헌, 참여, 홍보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CSR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이상의 법적, 사회적 의무가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유형이나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특성, 시대적 상황에 따라 CSR에 대한 강조점이나 범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은 준법경영으로 충분하며 기업은 무엇보다 이윤추구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반면,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발달해온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에 근로자 및 노조,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왔다.

국제적 차원의 CSR 규범

CSR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계기가 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있었던 만큼,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규범 제정이 이루어져 왔다. 최초의 국제규범은 OECD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1976년에 제정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이다. 최근 들어 널리 확산되고 있는 CSR 규범은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이다. 2000년에 출범한 글로벌 콤팩트는 ‘세계인권선언’,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UN 반부패협약’에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4개 분야의 10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규범이다. UN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글로벌 콤팩트 사무국은 세계 각국의 기업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이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이행약속을 받고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또 다른 중

요한 국제규범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침을 담당하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가 있다. GRI는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의 3 가지 측정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전 세계 55개국 507개 기업이 GRI 보고서 지침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¹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발한 ‘ISO26000’도 중요한 국제규범이 될 전망이다.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존중, 법의 지배 존중, 국제행동 규범 존중, 인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참여 및 발전 등 총 7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ISO26000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인증 제도나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의 CSR 전략 – 기업과 사회의 win-win을 위하여

1990년대 들어 유럽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정책 아젠다로 채택하여 2001년 5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본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CS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EU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간 CSR을 협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CSR이해관계자포럼’(European Multi-stakeholder Forum on CSR)을 설립하였다. 이 포럼에는 기업, 노조, 정부, 학계, NGO, 투자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CSR을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EU의 리스본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해 왔다.

또한 2006년 3월에는 ‘CSR유럽동맹(European Alliance on CSR)’을 만들어 기업주도의 CSR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CSR유럽동맹’은 사회적 책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회원국에 사회적 책임에 대해 홍보하고, 회원국들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사회적 책임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학교 교과과정에 사회적 책임 관련 과목을 도입하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의 국제적 홍보를 지원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및 산업담당 집행위원회 부위원장(Mr. Günter Verheugen)은 2007년 한 연설에서 “성장과 고용을 위해 기업에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책임 있는 기업지도자들은 근로자, 환경문제, 사회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기업에 더 많은 자유는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기업과 사회가 win-win하기 위해서는 CSR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U 회원국 차원의 현황을 보면, CSR 제도화에 가장 앞선 나라로는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자본과 노동의 통일적 조직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77년의 법제화를 통해 1979년부터 노동조건 ‘사회보고서(Bilan Social)’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사회보고서의 지표는 고용, 임금, 산업안전보건, 기타 근로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기타 기업관련 조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대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2001년

¹ 이종서(2010). “유럽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14(1); 노환균(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동향-국제기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6(3)



개정된 프랑스의 회사법은 상장기업의 재무, 환경, 사회측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독일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는 EU 회계현대화 지침이 적용되어, 상장된 대기업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EU 회계현대화 지침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독일은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독이사회에 주주측 대표와 동수의 노조측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의 경영참여 제도화”로 인해 노사 간 광범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은 2001년 8월 연금 운용회사에 대한 윤리환경사회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덴마크는 1996년 EU 최초로 환경보고서를 법제화한데 이어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환경보고서를 법제화하였다. 영국은 2001년 ‘기업책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연금의 사회책임투자(SRI)펀드 투자를 의무화하였다. 2005년 개정된 영국의 회사법은 사회적책임 관련 정보를 포함한 경영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주 및 주주 이외의 행위자에게 회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CSR이 제도화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 에릭슨, BMW 등 가족 기업의 성격을 가진 대기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투명성은 매우 높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노조의 경영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배당보다 고용과 투자를 우선시하며,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EU가 강조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시장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에서 ‘지속가능성’으로 : 독일 지멘스 사례

세계 초일류 기업인 독일 지멘스의 CSR 활동을 살펴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공헌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지멘스의 <지속가능성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09, http://www.siemens.com/sustainability/report/09/pool/pdf/siemens_sr_2009.pdf)를 보면 지멘스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멘스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08년부터 발간되고 있는데, 2007년까지는 <기업책임보고서>(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지멘스가 기업의 미래를 지켜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이웃, 즉 ‘기업시민’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주주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종업원, 지역사회,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멘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2009년의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멘스의 사회적 책임은 조금도 약화되거나 축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멘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창업자인 베르너 폰 지멘스의 ‘나는 단기적 이익을 좇아 미래를 팔지 않는다’는 철학과 부합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성 담당임원 임명 및 지속가능위원회(Sustainability Board) 설립

지멘스는 최근 본사 경영이사회에 지속가능성 담당 최고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를 임명하여 지멘스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전사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고책임자(Ms. Barbara Kux)는 지속가능성위원회와 지속가능성 사무국을 통해 전체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설립된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Siemens Sustainability Advisory Board)가 이러한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과학, 산업분야의 저명 인사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도 이 위원회의 멤버이다.

●지속가능성 활동의 주요 분야

지속가능성 활동의 주요 분야를 나눠 보자면, 준법경영, 환경경영,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근로자인권 존중, 공급(협력)업체, 기업시민 등 총 6개 분야이다. 준법경영과 환경경영은 이미 모든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시하는 분야이다. 지멘스는 직업 관련 보건과 안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근로자인권 존중은 작업 조건의 개선, 차별해소,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 직원 교육 및 훈련 투자 등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공정한 조달과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활동 분야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언급하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활동, 교육 및 연구 지원, 국내외의 사회적 인도적 지원 및 기부, 문화예술 지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기업시민활동은 지멘스재단(Siemens Stiftung Germany)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

지멘스는 설립 140주년인 1987년부터 문화라는 주제를 회사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가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멘스의 설립자 베르너 폰 지멘스는 생전에 음악상과 조형예술지원재단을 설립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지멘스의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지멘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을 이루어내고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창의적 사고, 발

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문화엘리트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멘스가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기업 내 문화적 태도를 함양시켜 창조적, 혁신적 의지를 일깨우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회사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려면 40만 5천명의 지멘스 직원으로부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며, 이 같은 혁신은 예술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멘스는 정기적으로 작품공모, 전시회 개최, 연극 및 음악회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UN Global Impact 등 국제규범 준수

지멘스는 자신들의 사회적책임 활동이 UN Global Impact와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s에 준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사말에서 지멘스의 회장 겸 CEO인 Mr. Peter Löscher는 지멘스가 UN Global Impact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은 이윤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가치 창조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함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의 공공성

EU와 지멘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럽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 이는 유럽기업들의 제도화된 CSR이 정치 및 경제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공익적 책임과 시장의 공공성을 중시하고 소비자, 노조 및 근로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조정시장경제체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독일과 유럽 강소국들에서 발전된 조정시장경제는 노사관계, 근로자교육훈련, 고용, 협력업체와의 관계, 금융조달, 기업간관계 등을 조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정치사회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및 사회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와 연계되어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비례대표제와 연립정부 등 권력공유 개념이 전제된다. 반면,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 및 다원주의와 조응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 자선, 사회공헌, 사회책임, 지속가능성 등은 어느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정치·사회적 의미는 사회정치적 체제에 따라 사뭇 다르다. 다시 말해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책임이 제도화된 의무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이 재산을 많이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의 부자들은 기부보다 ‘세금자선’을 한다. 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미국에서는 민간비영리부문이 많이 담당하는 공공서비스를 유럽에서는 세금으로 국가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같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조정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제도화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주주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제도화되고 의무화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사업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와 사회공헌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한국은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는 일정 정도 조정시장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개혁과 노동개혁은 미국식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악화되어 왔고 경영권 문제와 고용, 투자 등 국가 경제적 차원의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유럽기업과 같은 제도화된 CSR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조화로운 사회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를 공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복지, 경제성장 등 국민경제적 소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활동 이상

의 것이다. 현재 전 세계 100대 경제주체 중 52개가 다국적 기업이고 국가는 48개라고 한다. 즉, 대기업은 더 이상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적인 존재인 것이다. ★

김인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유럽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 개혁이 좌우

Economic reform policies are keys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EU countries

The European Policy Centre assesses EU member states' economic sustainability in its European Economic Sustainability Report, published in June, 2010. The EPC has developed an index that enables us to assess the short-, medium-, and long-term economic sustainability of EU countries and their relative positions to each other. The report finds that those countries suffering from sovereign debt problems turn out to be the worst performers. Spain, Portugal, Italy and Greece have the lowest scores with Greece very close to being the worst performer across all six domains. It concludes that further structural reforms are necessary if EU member states wish to avoid future crises. Through implementing effective reforms in their labour market, pension system and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they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governance,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유럽정책센터(EPC)는 지난 6월 〈유럽경제지속가능지수(EESI)〉 보고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경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이 지수를 근거로 유럽 각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였다. 또한 그동안 재정적자, 단기 성장률, 정부부채 등 단기적 요소에만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왔다고 지적하면서 유럽경제의 중장기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경쟁력과 함께 경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이 주요 요소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ESI는 유럽 경제의 이러한 단기적 속성과 중장기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EPC가 유럽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항목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자와 부채, 경제성장률, 경쟁력, 정부의 관리능력과 부패 정도 그리고 노령화 부담 등 6개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 EESI를 살펴보면, 현재 그리스 경제가 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스는 전 부문에 걸쳐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경제성장률(-1.0)과 정부 부채(-1.0), 정부 부패 정도(-1.0)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그리스는 단기적 수치와 장기적 수치 모두 위험요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부채와 경제성장률과 같은 단기적 수치가 더욱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위 유럽의 문제국가로 손꼽히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는 모두 이번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이탈리아는 부패 지수를 포함한 장기적 경제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적 경제지표 부문에 가중치를 높여 EESI를 산출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만이 ‘지속불가능’ 판정을 받게 된다. 반대로 단기적 경제지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수치, 즉 경제성장률과 국가채무 부문의 비중을 높여 EESI를 산출하면 이탈리아의 지수는 -0.25로(22위) 약간 호전되는 반면, 스페인의 지수는 -0.28(25위)로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때 유럽발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적받았던 아일랜드는 이들 국가보다는 지속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아일랜드는 경쟁력 지수(0.21)나 부패 지수(0.64)와 같은 경제의 장

★ EESI 기초 항목

항목	설명	구분
경제성장률	2년 평균의 연간 GDP 변화율	단기 지표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	중장기 지표
재정적자	정부의 총 재정적자	단기 지표
경쟁력 지수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지수(WCI)	장기 지표
부패 지수	정부의 관리능력과 부패 정도(CPI)	장기 지표
노령화 부담	연금 등과 같은 장기 지출 부담	장기 지표



기적 속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단기적 속성과 장기적 평가 지수 부문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은 부패 지수(1.11)와 경쟁력 지수(1.20)가 탁월해 이와 같은 경제의 장기적 속성에 가중치를 둘 경우 1위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에 EESI 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던 에스토니아는 이번 평가에서도 공동 2위를 차지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유럽 경제의 미래를 위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PIGS 국가들은 물론 EU, IMF의 지원을 받은 신규 EU 가입국들은 재정능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경쟁력을 길러 장기적인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EU는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기금을 마련해 이들 국가가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함과 동시에 장기적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자료: European Policy Centre (2010), European Economic Sustainability Index.) ★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2010년도 EESI¹

순위	국가	EESI 지수	구분
1	스웨덴	0.55	최상위
2	덴마크	0.45	
2	에스토니아	0.45	
4	핀란드	0.42	
5	네덜란드	0.28	상위
6	독일	0.24	
6	룩셈부르크	0.24	
8	오스트리아	0.20	
9	영국	0.07	중위
10	체코	0.05	
11	슬로바키아	0.03	
12	폴란드	0.02	
13	벨기에	-0.01	
14	불가리아	-0.02	
15	프랑스	-0.03	위험
16	아일랜드	-0.08	
17	슬로베니아	-0.09	
18	키프로스	-0.10	
19	리투아니아	-0.13	
20	몰타	-0.15	
21	헝가리	-0.17	
22	루마니아	-0.19	
23	라트비아	-0.22	
24	스페인	-0.23	지속 불가능
25	포르투갈	-0.29	
26	이탈리아	-0.38	
27	그리스	-0.93	

¹ 음영처리가 된 국가는 유로화 가입국이다. 에스토니아는 2011년 1월 1일부터 유로를 사용하게 되는 17번째 유로지역 회원국이다.



제6회 브뤼셀 포럼 The 6th Brussels Forum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6th Brussels Forum on the 30th of June, under the title “European Union’s foreign policies and the Korea-EU relationship” with a presentation given by Mr. Choi Jin-Wo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Mr. Choi led the forum by discussing three main issues: the meaning of a stronger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 EU’s different approaches to its strategic partners, and future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 closer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

연세-SERI EU센터는 6월 30일 제6회 브뤼셀 포럼을 개최하였다. 국회 본관에서 치러진 이번 포럼에서는 “EU의 대외정책과 한-EU 관계”라는 제목으로 최진우 한국유럽학회 회장이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의 입장에서 EU는 다차원적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과연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으며, EU와 이들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은 향후 한-EU 양자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주제로 발표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2회 EU 학생 방문 프로그램****The 2nd EU Summer Intensive Programme: 'Learn about the EU' 2010 Brussels Tour**

Yonsei-SERI EU Centre led a team of students on its "Learn about the EU" 2010 Tour from the 29th of June to the 1st of July. 23 Students and 3 members from the EU Centre(Director Ko, Dr. Yang from SERI, and Dr Ku from Yonsei University) went to Brussels and they had an opportunity to visit the EU Commission, the EU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They also visited the University of Brussels during their intense trip. EU Summer Intensive Programmes ("Learn about the EU") are design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s, who wish to become global leaders in various different fields, to visit EU's major institutions. This programme aims to aid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EU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

연세-SERI EU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브뤼셀에 위치한 EU 기구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 이사회, 브뤼셀 대학)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상두 EU센터 소장,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고주현 박사의 인솔하에 다양한 전공의 연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3명의 학생들이 현지에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2회째를 맞는 <EU 학생 방문 프로그램 (EU Summer Intensive Programme 'Learn about the EU') > 프로그램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유럽 통합의 현장인 EU의 여러 기구, EU 주재 한국기관 등을 방문하여 EU 및 EU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15회 EU 특별강연****The 15th EU Special Lecture**

Yonsei-SERI EU Centre's 15th EU Special Lecture, arranged by the Asia-Europe Foundation, was hel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of Yonsei University on the 21st of July. Dr. Luk Van Langenhove, a Director of the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Studies Institute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CRIS) in Bruges and a Representative of the Rector at UNESCO in Paris, gave a lecture on "The Regionalisation of the World. What does it Mean for Asia?"

연세-SERI EU센터가 주최하고 ASEF (Asia-Europe Foundation)가 주관하는 '제15회 EU 특별강연'이 연세-삼성 학술정보원 6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7월 21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강연에는 Luk Van Langenhove 박사(Director,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Studies Institute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CRIS) Representative, UNU Rector at UNESCO in Paris)가 발표자로 나서 "The Regionalisation of the World. What does it Mean for Asia?"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제8차 EU Core Circle Society 세미나 The 8th EU Core Circle Society Seminar

On the 29th of July,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8th Core Circle Society Seminar under the title "Stress-test results and the future of Europe's finance sector." Dr. Kim Deuk Kap, the director of the Global Studies Department at SERI explained the results of the stress test on European banks, which was published on the 23rd of July, and he gave a thorough overview on the current health of the EU's financial sector. The presenter explained the reasons behind different magnitudes and timing of the financial crisis in the US and the EU by going through a list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ir finance industries. He also showed that EU member countries' sovereign debt problems and the health of the EU's banking sector are closely intertwined. Participants discussed future implications of the EU's stress test on Korea's financial market and also its long term impacts on Korea's economy as a whole.

지난 7월 29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후원하고 연세-SERI EU센터가 주관하는 제8회 Core Circle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 은행들의 부실 현황과 향후 전망"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7월 23일에 발표된 유럽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테스트 결과인 스트레스테스트 발표 결과를 분석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맡은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유럽 금융산업은 미국의 금융산업과는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금융위기로 인한 유럽 은행들의 재무구조 악화 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가 발표한 유럽 91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번 테스트의 주요 이슈와 향후 유럽 금융업계의 전망을 발표하였다. 뒤이어 참석자들은 이번 스트레스테스트의 기준과 결과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 이 결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 일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